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 향 락



과거,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영산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적(籍)의 도자사로서, 영산강 사업을 고집하는 게 4대강 사업의 대처법에 있는 민주당과 진보단체에겐 이를 배반이나 다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는 '박준영 지사도 찬성한 4대강 사업'이라며 입맛에 맞춘 치부를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지사는 그게 토공(土工)이든, 운하든 이미 썩어버린 영산강 물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다면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소신을 냈다. 어떠한 가치도 현실에 앞설 수는 없다는 얘기다.

3년간 날아간 예산 5천억

박준영 지사는 지난 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 손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통과에 반발해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 지역사업을 쟁기고, 한나라당

은 이제 더이상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민주당의 투쟁은 투쟁이고, 예산안 심의는 심의다. 국회의원이 나라 살림을 심의하는데 거부하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 심

민주당이 등원해야 하는 이유

의를 제대로 해서 지역을 행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와 강 시장 모두 한미FTA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과 정서를 뻗히 알진데, 그에 반하는 민주당에 대한 등원 압박이라니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이란 데 있다.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절하면서 한나라당 단독 처리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피해를 본 예산만도 무려 5000 억 원 이상에 이른다. 문화전당 건립비,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비, F1대회 추

가 공사비 및 운영비, 경전선(광주~순천)복선 전철화 사업비,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비 등 항목 조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 부처에서 삼각되거나 누락된 지역 현안사업비를 국회 상임위에서 지역 의원들이 어렵사리 살려냈지만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발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악용해 광주·전남 현안 예산을 삼들 잘라 경상도 쪽에 밀어주는 억지도 막아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 등 지난 3년 간 주요 행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민주당 예산 심의 거부→

속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었던가. 아무런 사전 대책 없이 비준안 통과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지역 국회의원 역할 중요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등원할 수 있는 최대의 명분을 줘야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FTA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 내지 유감을 표명하는 게 우선이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에 정부가 즉각着手해 해야 할은 물론 법안을 단독 상정하지 않고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고서는 약수를 나눌 수 없지 않는가.

민주당도 이러한 명분이 주어지면 등원하는 것이 우를 범하지 않는 길이다. 만일 이게 아니라면 명분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물지도 못하는 개라면 짓지도 말라고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해서라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막아야 한다. 당신들이 상임위에서 힘들게 살려놓은 예산들이 물거품된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일이 아닌가. 그 피해가 호남에 한정돼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일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당신들, 이번 민름은 제대로 하라. 내년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논설주간> hlsin@kwangju.co.kr

시 실

난제 산적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시가 5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 로드맵을 제시한데 이어 건설방식과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광주시가 구상 중인 건설 시기와 방식이 정부가 권고하는 내용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당초 오는 2019년까지 27.4km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국토해양부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41.7km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건설방식 역시 국토부는 경량전철 가운데 무인운전 시스템의 AGT(고가) 방식을 도입하자는 방안인데 반해 광주시는 저상도(약전철) 및 모노레일(유인운전 시스템)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는 도시 미관과 저속화,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고가 방식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시의 방식대로 할 경우 사업비가 최대

20% 이상 늘고 운영비 부담도 커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와 국토부가 마찰을 빚게 될 경우 착공 지연 등 사업 표류마저 우려된다. 막대한 재원 확보와 운영적자 부담 등도 재정이 악화한 광주시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총 사업비 1조 7394억 원 가운데 국비 60%, 시비가 40%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7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운영적자 또한 도시철도 1호선을 보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을 시가 떠안어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이 시민 편의와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건설을 추진하되, 재원 확보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건설방식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자체 안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건설비 추가 지원 및 운영적자 부담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주민제안 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주민제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흥보 부족 등으로 주민참여가 저조한데다 접수된 제안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자체의 의지 부족으로 흥보가 잘 안 돼 주민참여도 떨어지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 자치구들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국민 신문고와 구청에 제안된 의견은 동구 34건, 서구 72건, 남구 110 건, 북구 93건, 광산구 54건 등으로 연간 100건이 넘는 타지역 구청들의 주민제안 건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접수된 제안 중에서도 북구 7건, 남구 3건, 동구 2건만 정책에 반영됐다. 더욱이 서구·광산구는 단 1건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광주지역 자치구 전체 제안 363건 가운데 단 12건만 반영된 것으로, 자치구들의 이 제도 활용 의지가 의심스러워지는 점이다.

주민제안제도는 각종 정책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창의적 의견을 수렴, 구

無 等 鼓

"북쪽은 고원지대로 출다. 유목민이 많기 때문에 유제품을 많이 먹어 내장이 차갑다. 이때는 뜸을 떠서 치료한다. 남쪽은 기후가 고온다습하다. 과일이나 신맛이 나는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사람들은 균육마비나 경련 등의 질병에 자주 걸린다. 이때는 가느다란 후침(毫鍼)으로 치료된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자체의 의지 부족으로 흥보가 잘 안 돼 주민참여도 떨어지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기구 없이 담당 직원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제안 반영 여부를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주민제안수렴위원회 등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대적인 흥보를 하고, 현재 최고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시상금도 대폭 상향해 주민 참여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알짜배기' 제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황제내경



최근 한법재판소가 구사(灸: 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鍼士: 침을 놓는 사람) 자격만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김남수 용

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에 처분을 취소했다.

이제는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적다는 이유에서다.

유구한 역사를 견뎌온 침과 뜸이 '과학'이라는 시대에 선 것 같아 안타깝다.

리무저증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기고



최희동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은 일본에 국권을 강탈당했다. 1876년 운암호사 사건으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던 일본은 '조선은 일본과 평등하다'며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대륙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일본은 라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조선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빼앗아 조선을 이를만 가진 형식적인 나라로 만들었고, 헤이그밀사사건으로 고종을 쫓아내고 군대를 해산했으며, 급기야 1910년에는 조선을 식민지화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했으나 훗날의 역사는 이들을 매국노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

지적장애인의 행복할 권리

있는 실정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룹홈에서 살기 시작한 지적장애인은 광주 시내에 있는 무등생활원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교육시설은 4개 초등학교에 이제 막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특수학급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특수학급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기였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주거시설은 수용소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지적장애인들의 생활은 인간이하의 생활이라 말할 정도로 열악했다.

시작 당시의 암마우스그룹홈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광주시내의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의 가정집에서 전개되었다. 주변에 시장, 공중목욕탕, 이·미용실과 병원 등이 있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편의시설들을 지적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었으며, 대중교통 수단들도 활용하기에 편리했다.

이러한 사업방향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많은 지적장애인들의 부모가 찾았던 1년도 채 되기도 전에 열다섯 명의 지적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직업 전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았으

며 저녁에는 그룹홈에서 생활하게 됐다.

1981년부터 성인지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일반기업체에 300여명을 취업시켰으며, 2011년 현재 130명의 지적장애인이 취업해 일하고 있다.

1985년 7월에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암마우스복지관(지적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한국 최초의 이용시설)이 개관됐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행복을 꿈꾸며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어려서는 부모나 친구들,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누구나 직장을 갖기를 원하며, 대부분의 성인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특정부분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장애인이라 해서 비장애인들과 특별히 다른 사람

이 아니며 욕구가 전혀 다른 것은 더욱 아니다. 장애인들도 성인이 되면 결혼하고 싶고

취업하여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적·자폐성장애인 하면 사회적으로 비교적 낮게 가치가 평가되어 있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들처럼 비슷한 행복한 삶을 가기란 무척 어렵다.

여태껏 장애인복지정책은 시스템·사회·제도 등을 아우르는 거시적·통합적 측면보다 장애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체계에 국한(예를 들면 세금 할인 및 감면, 소득공제, 공공요금 할인 등)되어 시혜적·수동적·소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실 장애인을 떠올리면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그것도 대규모시설로 비장애인과 격리된 채 살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얼굴을 떠올리기 심상이다.

광주시에서는 2011년부터 소규모 거주시설을 그룹홈 형태로 운영하고 암마우스집(장애인 거주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암마우스집에서는 그룹홈과 유사한 형태로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들에게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이 아닌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암마우스복지관 사회서비스팀장〉

지자체서 농번기 일손 지원 인력시장 운영했으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다. 재작년에도 복숭아농사를 짓는 이웃집 과수농가에서 일꾼이 다쳐서 나중에 치료비 때문에 소송까지 할 뻔했었다는 말은 적이 있다.

도시에서 농사일을 해주려 오는 사람들은 산재보험과 서둘러서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다행히도 한다. 그러나 서로 피해를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부모님은 서로 실망이를 하다가 결국 치료비를

일을 하다 몇만 원의 일당을 주는 일에 몇백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니 농민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울분이 터지겠는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번기에 농촌의 일손을 지원하는 인력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서 산재보험과 들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위주로 일꾼을 선발해서 농촌에 일손을 드는다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연설·광주시 동구 산수1동

지난가을에 고향 부모님이 과수원의 사과를 따기 위해 일손을 구하던 중 동네에는 마땅한 일꾼이 없어서 읍내로 나가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부탁해서 아주머니 2명을 일꾼으로 소개받았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사과를 따는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인대가 끊어졌다. 병원에 갔더니 인대를 이어

불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이를 뒤엔 무릎수술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무조건 병원비를 아버님더러 다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일꾼을 얻은 것은 농가이지만 작업 중 부주의로 그쪽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모님은 서로 실망이를 하다가 결국 치료비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唐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자자·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